

‘국가균형발전’ 개정안 의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개명

10조 균형발전 예산·혁신클러스터 지정권 등 위상 강화

기업·일자리 대부분 수도권 몰려 지역발전정책 예산편성 등도 맡아 7월까지 시행령 개정 완료 계획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풀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 이름이 변경됐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은 9년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되고 그 위상과 역할도 강화된다. 또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국가혁신클러스터에는 보조금, 세제 등 여러 지원이 집중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생산·의료·문화시설 등이 집중돼 지역에 따라 국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 산업부와 지역위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1000대 기업 본사와 고급 서비스업 일자리의 약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부여한 헌법 가치를 법 전반에 걸쳐 강화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정책 자문·심의에 그쳤던 기능에서 예산 편성, 정

책 의결 등까지 맡게 된다.

중앙부처는 연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편성할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 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예산 당국도 정부예산안을 배분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포괄지원 협약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때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에서 혁신도시·산업단지·대학 등과 연계해 계획을 세우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보조금, 세제, 금융지원, 규제 특례, 혁신 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도 주도의 지역혁신체계 가동안도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대학, 기업, 과학·산업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시·도별로 설치돼 시·도의 발전계획과 지역혁신체계를 평가하는 내

용이다.

송재호 지역위 위원장은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참여정부 이후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건설의 주춧돌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차질 없는 후속조치 이행을 약속했다.

한편, 산업부와 지역위는 오는 7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오는 10월에는 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조속한 조성을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수립지침 마련과 중핵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유치지원단 출범식 등 제반 준비작업도 올 상반기 중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13일 오전 광주 동구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광주 동부소방서 무등산119 시민산악봉사대, 재향소방동우회 광주광역시지부 회원 등이 불철 산불 예방 캠페인을 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돕는다

광주시, 악취방지시설 등 교체 지원

광주시는 13일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 영세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관내 노후 및 민원

이 다량 발생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서 악취(VOCs) 방지시설, 백연(유증기) 방지시설,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를 하고 자 할 경우 대상이 된다.

지원내용 및 조건은 방지시설 설치비용 8천만 원 이하 시설개선 비용의 경우 4천만 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분담비율은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비율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신청

서식에 따라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해야 하며 향후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광주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광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

진도군 52억 투입 ‘노인 일자리 사업’ 시작

진도군이 올해 52여억의 예산을 들여 1807명의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25개 사업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최근 읍면과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 진도문화원, 진도노인복지관, 서경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별로 발대식을 갖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난해보다 18억3000만 원이 증가된 총 52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도읍내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질서와 주정차계도사업, 게이트볼·파크골프 강사파견, 문화재·유적지·공원·체육시설 주변관리사업

등의 공익활동사업을 실시한다.

취약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해 말벗과 안부확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노-노(老-老)케어 사업 등 25개 사업에 총 1807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연중 운영하며, 공익활동형 사업은 11월까지 9개월간 추진된다. 근무시간은 월 30시간, 1일 3시간 이내로 월 27만원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인 소득 보장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며 “지역 특성을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 더 많은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진도=김남중 기자

제1회 지방정부일자리정책 박람회 구례군 ‘행안부장관상’

구례군은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한국일보가 공동주

최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총 243개 기관이 790개 부스를 열고 지역 현장의 일자리 정책과 정보를 소개했다.

군은 민간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지원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사업가 육성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정책 모델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남 구례=김남중 기자

광주지역 극단들, 관객과 함께 완성하는 ‘1인연극’ 선택

예산난에 시달리는 광주지역 극단이 실험적인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제목은 ‘오천원 짜리 연극 -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이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이다.

극단 ‘얼·아리’는 오는 5월 14일 1차 공연을 목표로 참여 관객 모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 연극은 1인 극으로 사전 대본 없이 참여 관객 10명과 대화하며 대사를 완성해 가는 실험적 연극이다.

2014년 전국연극제 등 전국대회에서 2차례 대상을 받은 이 극단은 공모 탈락으로 올해 광주문화재단의 재정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극단 대표 양태훈씨가 이번 연극을 1인 극(모노드라마)으로 꾸민다. 그는 참여 관객 10명과 함께하는 연극을 구상했다.

관객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대화를 통해 창의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관객 입에

맞는 대사를 공연 중에 완성하는 방식이다.

공연이 끝나면 관객 중 1명을 뽑아 연기상을 줄 계획이다. 상금은 5000원이다.

양 대표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참여 관객 10명을 모집한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 등 광주 관련 커뮤니티와 각종 언론, 사회적 관계망(SNS)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광주=김남중 기자

광주 북구 야구장 주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광주 북구가 야구장 인근에 사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

매년 KIA 타이거즈 홈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경기장 주변 대로를 중심으로 관중 차량이 이중·삼중으로 불법 주차돼 인근 아파트 진입을 방해할 뿐 아니라 퇴근 시간 극심한 차량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광주 홈 경기가 72경기나 예정돼 있고, 지난해 우승으로 야구에 대한 지역민들이 관심이 높아져 관람객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북구는 오는 24일~25일 열리는 홈 2연전을 시작으로 프로야구 정규 시즌 동안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경기 시작 전 1시간부터 경기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이동단속반 차량의 경우

1차 촬영 후 10분 후 2차 단속을 하고, 도보 단속은 예고문 부착 10분 경과 후 사진촬영 단속한다.

북구는 특히 이중·대각주차 및 천변우로 이·삼중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북부경찰서, 인근아파트자치회 등과 함께 의결·안내요원을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에 배치해 지속적인 교통지도에 나선다.

송광은 북구청장은 “야구장 주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김남중 기자